

광주 ‘첨단재생의료’·전남 ‘소형 e-모빌리티’ 탄력

중기부 규제자유 후보특구 선정
광주, 생체의료산업 고도화 추진
전남, 기업 해외 진출 발판 기대
“중앙부처 협력·특구지정에 전력”

광주시의 ‘첨단재생의료’와 전남도의 ‘소형 e-모빌리티’가 정부의 올해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공모한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에 광주시의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사업’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지난 7월 공모해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광주시와 전남도를 포함해 최종 7개 시·도를 후보특구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들 후보특구 지자체에 국비 1억원씩을 지원해 과제를 구체화한 ‘특구 세부계획서’를 작성토록 했다.

중기부는 내년 1월께 후보특구들로부터 세부계획서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받아 지역경제 기여도, 사업화 가능성, 제도 혁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특구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한다.

광주시는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와 치료가 가능한 전남대학교병원을 주관기관으로 해 이 사업을 총괄하고, 광주테크노파크를 협력기관으로 삼아 특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10월 중 첨단재생의료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공모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실증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이를 ‘특구 세부계획서’에 반영, 내년 1월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계획하는 첨단재생의료 특구는 광주 전역(동구 대학병원지역, 서구 병원밀집지역, 남구 빔고을전남대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의 약 90만평 규모이며,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 중인데, 우리나라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로 산업 발전이 더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 규제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특구에서는 환자 수요는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세포치료, 조직 공학치료, 융복합 치료, 역소염 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지원해 임상 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환자 치료권 확대, 글로벌 기술기업 육성 등 첨단재생의료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재생의료 연구·심사는 보건복지부 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에서만 가능한데, 광주시가 첨단재생의료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 재생의료 연구·심사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 전남도의 ‘소형 e-모빌리티’도 선정돼 전남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및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지난 2019년 처음 지정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이후 달성한 쾌거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 산업육성의 결집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e-모빌리티 기업 9개사와 1454억 원의 투자 유치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성

과를 확산하고 캐즘 현상으로 침체를 겪는 국내시장 회복과 급속도로 커지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캐즘 현상이란 첨단 기술이나 상품이 개발돼 출시된 다음, 초기 시장과 주류시장 사이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돼 단절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번 후보 특구로 지정된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e-모빌리티 중심 그랜드 전남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다. 전남도는 산업 생태계 고도화와 미래차

산업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025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4륜형 전기이륜차 승차원형 확대와 초소형 전기차의 중량 제한 완화 등 규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고, 전남이 보유한 기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광주시 외국인친화병원 현판식 전달 강주오 행복을주는가정의학과의원 원장 등 ‘외국인주민 친화병원’ 20곳의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광주시청에서 ‘외국인 주민 친화병원 지정 의료기관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외국인 주민이 안심하고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적정 진료 및 합리적 비용을 제공한다. ▶관련기사 7면

광주시 제공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에 6곳 신청

서구 1·남구 1·광산구 4곳
“적합한 입지 발굴에 최선”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개인과 단체 등 총 6곳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1, 남구 1, 광산구 4곳이다.

광주시는 지난 8월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5개 자치구가 지난달 2일부

터 30일까지 개인·법인·단체 등의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자치구는 신청부지에 대한 현지여건,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부지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 자체 후보지를 발굴해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한다.

이는 그동안 진행한 공모방식과 다르게 광역시 최초로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진행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사업추진을 통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자치구별 적정 후보지 1개소 이상 제출 노력 △최종입지 자치구에 편익 시설 설치비 600억 이상, 특별지원금 500억원 지원 등에 합의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입지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간의 공모 과정에서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을 공모안내

서에 담아 별도로 안내한 만큼 제출된 시점부터 세부적인 평가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폐기물시설축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입지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며,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권역별·행정동별 주민설명회, 대시민 홍보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등 친환경 시설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제작한 슷폼 3편을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필요성과안전성 등을 다양한 형태로 안내하고 있다.

광주시는 입지 후보지를 제출하지 못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1개소 이상 신청 노력이라는 부분이 지켜지도록 남은 기간에 독려할 예정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적합한 입지가 발굴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태양광 발전사업 설치계획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제2항,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의거 발전사업내용의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전소명
: (유)금당, (유)금강1호태양광
- 설치위치
: 전남 해남군 북일면 운전리 산169-1번지
- 면적
: 33,421㎡
- 설비용량
: 1MW급 × 2개소
- 사업개시 예정일
: 2027년 10월
- 운영기간
: 2024년 10월 02일 ~ 20년간
-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간
- 의견제출 및 열람요청 이메일
: ksl8862@naver.com
· 열람기간 : 2024. 10. 02 ~ 2024. 10. 08
· 열람내용 :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계획서

2024. 10. 02.

(유)금당외 1개소

무안군 공고 제2024 - 1131호

「무안 환경-해제 도로시설개량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공고

「무안 환경-해제 도로시설개량공사」를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9. 30.

무안군수

- 사업명
: 무안 환경-해제 도로시설개량공사
- 위치
: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해제면 만풍리 일원
- 사업규모
: 연장 L=7.88km, 폭원 B=11.5~17m
-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일 ~ 2030. 1
- 열람기간
: 2024. 09. 30. ~ 2024. 10. 14. (15일간)
- 열람장소
: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 제출장소
: 무안군청 건설교통과 서면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일반 063-850-9259), 무안군 건설교통과(☎ 일반 061-450-5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공고 제2024 - 230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생활대책 시행 공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552(2020.12.31.)호, 전라남도 고시 제(2020.12.31.)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이주및생활대책수립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생활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4. 10. 02. ~ 10. 31.
* 기간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제출에 한하여 접수하고 접수증은 발급하지 않음.
* 우편제출은 신청기간 이내 우리공사에 접수된 분에 한하여 유효함.
○ 신청장소 및 연락처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빔고고객센터 (분양보상팀)
062-600-6711 ~ 6717
○ 구비서류 : 「생활대책 시행 안내문」 참고
- 시행내용 및 선정기준
○ 시행내용 (공급유형) : 근린생활시설용지
○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 2020. 6. 25.
- 신청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문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생활대책 대상자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공고(발송)하는 것이므로 안내문을 통보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생활대책 대상자 자격여부는 접수된 서류 등을 기초로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른 심사 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 생활대책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도 관계법령 위반, 자격미달, 제출서류의 위조·변경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견한 때에는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생활대책 공고문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mcc.co.kr →정보마당→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통지 되는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 및 안내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공사 내부지침 등 포함)의 기준에 따릅니다.

2024년 10월 2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